

“도,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을”

도의회 문건위, 예산심사서 업소당 70만원 편성 요구
조봉업 행정부지사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 증액 어렵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3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행정명령 이행 업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에 앞장 선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에 전액 도비를 활용해 7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안)을 525억 원(행정명령 이행업소 59,365개소 420억 원, 특수직군 15,014명, 105억 원)을 편성했다.

문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는 타당하나, 전북도내 소상공인이 타도에 비해 매출액이 적어 전국 평균 손실보상 규모보다 더 적게 보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최소한 전국 평균수준에 맞춰 100만 원씩은 지급해야 가뜰이나 어

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몸도 마음도 지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부분에서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건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순세 계잉여금, 세입추계 등의 추세와 시·군비 부담 등을 통해 충분히 증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계속조정 시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만경강 테라시티 추진할 것” 전주시장에 도전하는 조지훈 전 경제통상진흥원장이 2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원주, 익산을 아우르는 경제통합특별시인 만경강 테라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발전, 이재명의 문제의식에 잘 맞을때 극대화 가능”

김윤덕 의원 “이 후보에 많은 현장 활동 주문 중”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2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는 정형화된 이미지와는 달리 신중하고 사람이다며 “현장에서 만나보면 유권자들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신중하지만,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진다는 것이다”며 “이 후보는 현장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최근 구성된 선대위에서는 조직본부 공동수석 부분부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현장 활동을 많이 하고 대중들을 많이 만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 이미지가 호감으로 많이 바뀔 것”이라며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현장 활동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미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전북도지사 선거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개 시·군에서 당원을 열심히 모았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도민들과 힘을 합치고 있다”며 “전북의 발전은 이재명 후보의 문제의식에 잘 맞을 때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

“학생 볼모로 한 사안 조속히 해결돼야”

교육위, 교육청 본예산 심사 앞서 정책 질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23일 도교육청의 2022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회에서 다른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건립 감사 건,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전주예술중고 학생들의 문제 등에 대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밖에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교육부에서도 코로나19로 실시된 원격수업이 학습격차를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함께, 교육 급여 대상 학생에게 10만 원을 지원한다”면서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전북은 수도권

과 비교했을 때 학습격차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와 함께 하는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강영구 의원(남원)은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신·선정된 학교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다는 현상의 지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그린스마트 미래사업은 올해는 31억, 내년에는 28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예산을 확대해 기존 계획된 학교보다 더 많은 학교를 추가 선정할 만큼,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인력 확보와 선정될 학교의 의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식 의원(군산)은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있어 교육부는 방화셔터를 방화스크린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으나, 전북의 교체율은 불과 36.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의 감질 감사, 원주교육지원청의 횡령 사건 등을 보면, 도교육청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회계사고를 줄일 방안과 감사관 선정 방식 등을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들이 마지막 횡령 사고이자 마지막 감사 논란이 되길”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선책 모색

이원택 · 이개호 의원, 농업부문 근로자 문제 관련 토론회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상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농·어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개호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주최하고, (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전국농민총연맹이 주관, 국제농업추진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한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진영 박사가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상태와 과제,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장덕상 사무총장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강원대학교 농생명과학 대학 신희중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토론자로는 유원상 과장(농식품부), 정병준 박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양정석 사무총장(전국농민총연맹), 최범진 정책조정실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영미 대표(무안 보광인력)가 참여한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농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이유와 농업부문 비공식 외국인 근로자 공급 발생의 문제 등이 집중 다뤄질 예정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문제점의 분석과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 농어촌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촌의 일손 문제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생산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업의 근로 특성이 계절성, 저임금 등에 있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보충해 왔다”며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 시립 작은도서관 체계적 지원책 마련을”

박선전 전주시의원

전주지역 시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진북, 인후·2동, 금암1·2동, 행정간사 위원장)은 23일 전주시 책의도시신문 교육분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생력 부족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0여 개 시립 작은도서관 가운데 사서를 채운 5개 정도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시는 순회 사서 채우기도 늘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는 등 책의도시 전주 비전 실현에 대한 기대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지정·단속에 따른 각종 갈등과 행정 대처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시민교통분부를 피감 부서로 한 행정감사에서 “어린이와 노인 보호 구역에 대한 법 시행으로 각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각종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나, 행정은 법만 강조하고 대책 마련에는 뒷집을 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행정에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뿐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등의 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에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공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주민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마을 선정 편중돼선 안돼”

농산경위, 도 농축산식품국 예산 심사서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3일 제88회 정례회 기간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철수 의원(정읍)은 “출산여성 농가도움이 지원사업과 관련해 예

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출산율 및 전년도 미집행 사유 등 자료 근거를 바탕으로 할 것”을 강조하며 “사업규모 측면에서도 80명밖에 선정하지 않았는데, 지원대상 기준 및 홍보 부족 문제 등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나인린 의원(김제)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업규모가 1,059명이며 3년간 사업이면 지난해 2018년에 선정된 청년 창업농

2022년에는 예산지원 대상에서 빠져야하는데, 인원선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줄어드는 사업규모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재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원주)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 2022년에는 520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마을을 선정할 때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원하는 곳이 많은 만큼, 마을 선정에 있어 편중되지 않도록 심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재연 “새만금 신공항 건설, 미군 군산공항 확장에 불과”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새만금은 설계부터 잘못된 불량품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는 미군이 운영하는 군산공항의 확장사업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신공항 반대는 진보당의 당론이며, 새로운 발전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종식해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정치, 노동중심의 평등사회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중대형상용차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격상시키고, 농민기본



법 제정에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150만 원 지급으로 농정대전환을 실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농림노동자 국가직접고용, 새만금 신공항 추진 중단 및 새만금을 친환경 평화의 민족 식량기지, 공공기관 전북이전 등 5가지 전북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

“공공하수처리 진행 차질 없어야” “전북 미래먹거리 발굴 잊지 말길”

환경위,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심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3일 환경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 예산 및 기금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이명연 위원장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가 약 25억 원 감액됐는데, 사업진행 및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이나 자연휴양림 사업에서 시·군비 미확보로 사업비가 삭감됐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과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보조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의 국비가 감액됐는데 민원 발생으로 인해 사업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원활한 민원 해결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문건위, 도민안전실 예산심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3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회복을 위해 전 도민 긴급재난지원금과 행정명령 이행업소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전북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은 “도민안전보험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며 “도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내년에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익산)은 지역안전지수 개선 T/F팀 운영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질의하며, T/F팀에 시·군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